



IV 주요 통계

1 과학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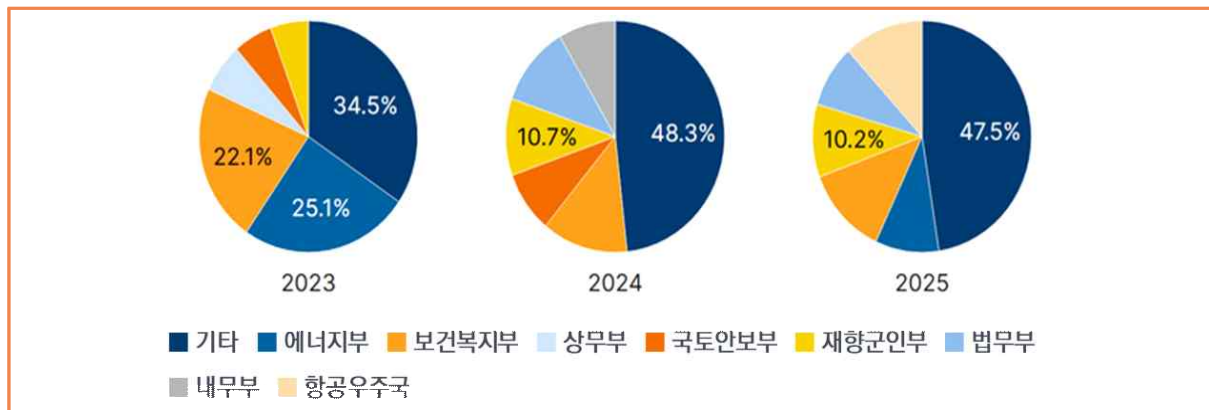
미국 연방정부 AI 도입 현황

브루킹스 연구소는 연방정부의 AI 도입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AI 사용 사례 재고, 연방 일자리 데이터, OMB 메모, 정보 제출 요청, 8개 기관의 전·현직 연방 기술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AI 활용 수준,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26.4.)

* Assessing the state of AI adoption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 ➔ 지난 3년 동안 AI 도입 범위와 속도가 크게 빨라졌지만, 연방정부 전반의 AI 사용은 여전히 소수의 대형 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AI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
- 연방정부 내에서 AI 도입은 초당적인 우선순위였으나, 그 사용 규모와 속도는 기관마다 차이가 존재
 - AI 사용 사례 보고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의무화되고, '24~'25년 대통령실 관리예산실의 보고 체계에 반영되며 연방기관 전반의 AI 활용도가 크게 증가
 - '25년에는 41개 기관이 3,600건 이상의 개별 사용 사례를 기록했으며, 이는 '24년에 보고된 총 건수의 약 1.7배, 2023년에 보고된 건수의 약 5배 수준

〈 AI 활용 사례를 보고한 연방기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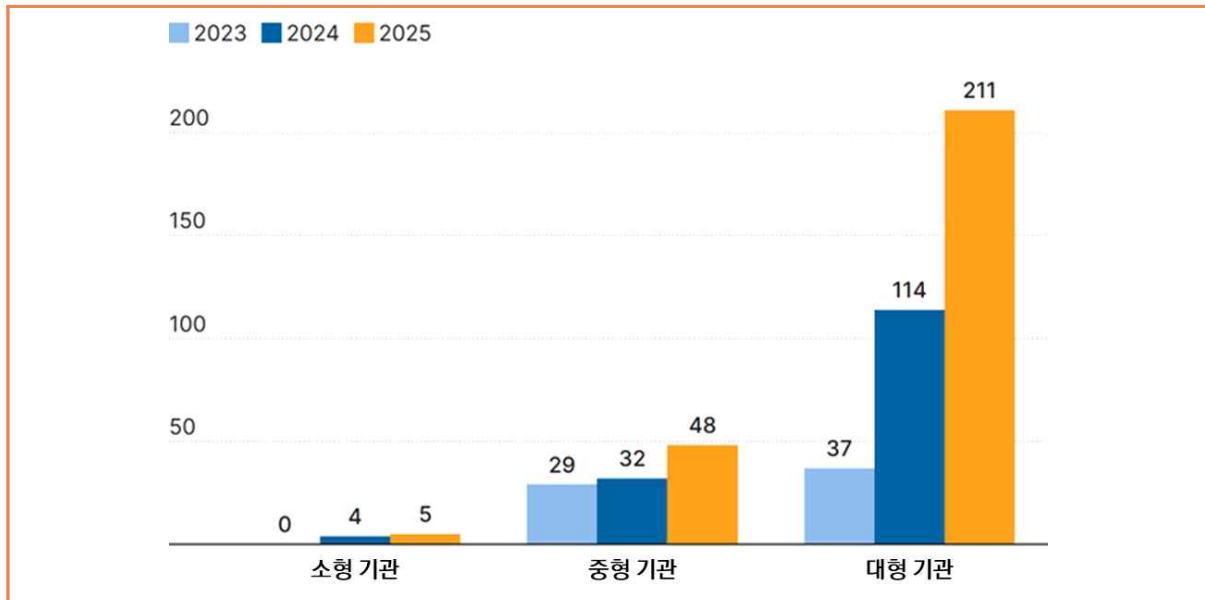


출처: 브루킹스 연구소 (2026) Assessing the state of AI adoption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 기관 규모에 따라서 AI 활용도에도 차이가 있으며, 더 많은 직원과 작업량을 가진 대형 기관일수록 AI 도입 규모와 속도가 커지는 경향
 - 지난 3년간 대형 기관 5곳에서 제출한 활용 사례가 전체 연방기관 사례의 50% 이상이었으며, '24년에 69%, '25년에 76%로 확대

- 대형 기관은 '25년에 평균적으로 211건의 사용 사례를 보고했으며, 중형 기관은 48건, 소형 기관은 5건에 불과
- 이는 '24년 대비 각각 114건, 32건, 4건에서 증가한 수치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형 기관은 더욱 공격적으로 확장함을 의미

〈 기관 규모별 AI 활용 사례 〉



출처: 브루킹스 연구소 (2026) Assessing the state of AI adoption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 연방정부가 AI를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인력 부족, 위험 회피 문화, 제도적 시차 등이 존재
 - (전문 인력 유치 한계) 민간 대비 낮은 보수와 느린 채용 절차로 인해, 정부 내 AI 전문 인력 비중이 전체 기술 직무의 3% 미만 수준
 - (위험 회피 문화 및 외부 의존) 보수적인 공직 문화와 리더십 인식이 부족하며, 전면 도입 시 외부 용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존재
 - (제도적·재정적 시차) AI의 불투명성과 빠른 발전 속도가 경직된 정부 예산 주기 및 정적인 보안 인증(FedRAMP, ATO 등) 절차와 충돌
 - (대중적 불신 및 정치적 리스크) 대중의 자동화 거부감과 법적 가이드라인 부재, 거대언어모델(LLM)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정부 신뢰도를 저하
- 보고서는 이러한 방해 요인을 극복하고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1. 실무 중심 채용 개혁과 전 직군 대상 리터러시 교육
 - 임기제 기술 인력 프로그램의 목적과 차이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연계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대책 마련



- 공동 인증제 도입과 특별 채용 권한 확대를 통해 정규직 기술 공무원의 채용 절차 전면 개혁
 - 기술직 공무원의 장기 성장을 지원하는 경력 경로를 마련하고, 현장 제약에 밝은 전문가용 융합 보직 신설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할별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성과 평가 과정에 연계 및 보상 제공
 - 범정부 차원의 AI 성공 사례와 교훈을 축적·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처 간 공동 학습을 유도하고 대중적 인식을 개선
 - 소프트웨어 단가 일원화 및 공동 툴킷 제공 등 중소 기관의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 집중식 자원 확충
- 2. 예산 조달 구조의 유연성 확보와 조달·보안 규제 혁신을 통해 기술 현대화 촉진**
- FedRAMP 인증 가속화 및 FAR, ATO, PRA 등 경직된 보안·조달 규제를 유동적인 AI 특성에 맞춰 재정비
 - 급변하는 AI 기술 속도에 대응하여 의회와 협력해 기술현대화펀드(TMf) 등 유연하고 안정적인 예산 조달 구조 확보
- 3. 부처별 데이터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높여 정부 AI 서비스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구축**
- 통합 플랫폼(AI.gov)을 개편하여 각 부처의 AI 감독 및 도입 실적을 단일 창구로 투명하게 통합 관리
 - 민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위험 모델 검증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 제공
 - AI 사용 사례의 식별 체계를 일원화하고 고위험 도입 건의 위험 완화 조치 명시
 - 정부 공공 애플리케이션용 LLM 조달 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증 기준 제시
 - 복지 혜택, 기상 예측 등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부작용 위험이 낮은 긍정적 서비스에 AI 투자를 집중

출처: 브루킹스 연구소 (2026.4.14.)

<https://www.brookings.edu/articles/assessing-the-state-of-ai-adoption-across-the-federal-government/>